

2009 연두 업무보고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08. 12. 24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연두 업무보고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

'08. 12. 24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다가오는 경제위기

2009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병든 부모님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몇 배나 큰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상황 인식

2009년도 업무보고는 위기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제때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기존의 사업계획에 융합시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힘이 부치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정책방향 및 재정계획

'09년 예산 편성시에 예상했던 내년도 경기전망보다 더 나쁜 상황도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상황 악화시 추진해야 할 추가대책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I. 200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II. 『위기대응』 과 『성장잠재력 창출』 핵심과제	3
1 :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과제 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6
과제 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
과제 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1
2 :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과제 4.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
과제 5. 저소득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5
3 : 보건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7
과제 7.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
4 : 효율적인 복지행정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과제 8.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20
과제 9.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22
[핵심 상시과제]	
과제 ① 저출산대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25
과제 ②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6
과제 ③ 먹을거리 안전	27
III. 재정조기집행 계획	28
< 불 임 > 1. 주요 과제 실천계획	31
2.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33
3. 주요 법안 입법 추진현황	37

I. 200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① 신빈곤층 증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의 빈곤 심화와 실직, 사업 휴·폐업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빈곤 추락 우려

* IMF 금융위기시 소득계층별 소득감소율('98)

: 1분위(-20.5%) > 2분위 (-11.5%) > 평균소득계층(-6.7%)

-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삶의 질 악화 우려

⇒ [정책방향] 위גיע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 와 중산층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 필요

②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국내외 기회요인 증대

- 경제위기를 국가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생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

※ 세계의약품시장 규모: \$6,020억(05) → \$9,900억(10) 증가 전망(IMS)

⇒ [정책방향]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③ 복지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 보호 및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복지재정 증가 예상
- 재정여건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기금 및 민간 재원 등 각종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 필요

⇒ [정책방향] “복지시스템” 개편과 “추가적인 재원 발굴” 필요

Ⅱ. 『위기대응』 과 『성장잠재력 창출』 핵심과제

【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김부장 가족 】

구분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아빠(49세)	월 350만원	회사부도로 실직
엄마(47세)	가정주부	남편 실직으로 K마트 판매원(임시직)
아들(22세)	대학 3학년	휴학
딸(18세)	고2 재학(학원비 70만원)	학원 중단
할머니(75세)	치매 환자, 며느리로부터 수발	며느리 취업으로 수발 중단

◇ (여건) 기초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이외에도 의식주·의료·교육 등 기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 증가로 국민 불안 확산 우려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빈곤대책은 최근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재산·부양기준 초과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08) : 370만명

○ 소득 감소와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빈곤함정”으로 빠질 위험 증대

◇ (정책방향) 사회분야에도 한시적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

○ 빈곤의 장기화와 중산층의 몰락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09년 역점 실천과제

○ 『기본생활 보장』 :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기준 완화 등

○ 『의료이용 보장』 : 건보료 및 의료비 부담경감 등

○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 : 긴급복지지원단 설치 등

※ 경기 악화시 사회안전망 강화 추가대책 검토

과제 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①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요건) 폐업, 사고·부상·질병을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재산기준 완화
 - 위기사유 완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폐업, 사고, 부상, 질병 추가
 - 금융재산(120만원 → 300만원), 총재산(대도시 95백만원 → 135백만원)
 -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변동없음 : 4인가구 기준 199만원)
- (급여) 교육지원 신설 및 급여기간 연장 (4개월→6개월)
- (추가 소요재원) 891억원(폐업 2만건) 예상
 - * '09년 515억원 (4만2천건, 11만명) 기확보
 - * 추가소요분은 기초보장 부정수급 단속 등 절감예산 활용 검토
- (향후계획) '09.1월부터 시행

②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5만 명 추가보호, 예산 기확보)

- (소득) '09년 최저생계비 인상 : 127만원 → 133만원(4인기준, '08년 대비 4.8% 인상)
- (재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 대도시 재산기준 대폭 완화('09.1)
 - * 4인기준 대도시 최고재산액 6,900만원 → 8,500만원(1,600만원 인상)
 - 중소도시 최고재산액 6,100만원 → 6,500만원(400만원 인상)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시행('08.11월)
 - * 중소도시 기준 95 → 126백만원(평균 주거용재산 1.8억원의 52%→70%)
 - 현행 소득기준 4인 225만원(평균소득 357만원의 63%)

3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 지원 확대

○ (결식아동)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을 국고로 한시 지원

- 학교 담임교사, 통리·반장 등을 활용,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08년 29만4천명 → '09년 45만4천명(16만명 확대, 국고 421억원)

* 경제상황 악화시 최대 68만명까지 증가 예상(추가소요 543억원)

○ (기부식품)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식품지원 확대를 위해 식품 기부 인프라 확충('09.6)

- 식품기탁 문화 촉진을 위해 식품기탁함 설치(350개)

-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푸드마켓 확충 및 푸드뱅크 활성화

* '08년 22개소(서울) → '09년 67개소(지방 45개소 추가 설치)

- 기부식품 제공의 지역편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푸드마켓 등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

【 경기악화시 추가검토 대책 】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한시보호’ 제도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식료품·교육·주거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비수급빈곤층 평균재산액 : 97백만원, 평균소득 : - 43만원 (= 소득60 - 지출103)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제도

- 실직·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였으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 대부(예. 이자율 1%, 3년 거치 10년 상환)
- ⇒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고리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 전락을 방지하여 ‘빈곤탈출 기회 제공’
- '09.1월부터 용역(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모델, 실시방안 마련

과제 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대책

-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실직 또는 퇴직시 일정기간까지 직장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 등 연장 (현재 7만명 대상)
 - 대상 :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 → 1년
 - 기간 : 6개월간 직장보험료의 50% 부과 → 1년간
- 체납 등으로 의료이용 제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보험료 일정액 이하 전체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 지원 또는 경감 추진

* 보험료 1만원 이하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예 : 50%) 지원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다각적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및 본인부담 상한선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6개월 120만원 → 60만원으로 인하

- 희귀난치성 질환, 미숙아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08년 7만7천명(650억원) → '09년 9만1천명(763억원)

- 저소득층·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 '08년 100만 가구 → '09년 120만 가구로 지원 확대

* 혈압·혈당 측정, 욕창 관리, 투약 관리, 영양·운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3 건강보험 혜택 강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 (연간 6,100억원, 652만명 혜택)

- '09년 보험료 동결에 더해서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강화

<건강보험 혜택 강화 내용>

-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 보험료 하위 50%(400만원 → 200만원), 50~80%(400만원 → 300만원)
 - * '09년 36만명 수혜 예상('08년, 29만명)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 → 10%, 60만명)
-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 5%, 67만명)
- ▶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
 - * 5세~14세 소아 중 80%인 489만명 혜택

【경기약화시 추가검토 대책】

◇ 위기계층을 위한 의료비 긴급지원 확대

- 건강보험 등 의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입원·수술비용 장기 저리 용자(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대상)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상지원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과제 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①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총력지원 체계 구축

- (민관협력 체계) 민간복지단체 중심으로 『민생안정지원본부』 발족
 -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232개 시군구)에 긴급지원분과 운영
- (위기가구 발굴) 주요 유관기관 및 서비스 인력 활용
 - 건강보험 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보험료 체납자, 실업급여 종료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가구 발견
 -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 방문서비스 제공인력(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등) 활용(총 12만 6천명)
- (지 원) 공공 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 결연·후원 등 연계

②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 (읍면동) 위기가구 발생시 신속한 조사·확인을 위해 복지 현장 보조인력 배치
 - 지자체 채용 예정인 행정인턴 중 3,500명
 - 독거노인·영세자영업자·차상위계층 등 관내 빈곤위험계층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보호
- (시군구) 위기가구 발생시 지체없이 긴급복지지원 결정
- (복지부) 희망복지콜센터(129)를 활용, 24시간 긴급지원 신청·접수
 - 지자체 복지대상자 지원, 수급권자 권리구제 및 애로사항 해결

-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 및 소득하락 → 가정해체 및 가족기능 저하 →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악화
- 아동기 영양결핍·교육여건 악화 등 장기적인 영향을 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Worldbank, '08)

◇ '97년 외환위기의 경험

(아동) 요보호 아동발생 급증 : 27%('97 : 12천명 → '98 : 15천명)
 (노인) 가족부양이 어려워진 노인의 시설상담이 1순위로 급증(한국노인의전화)
 노인자살비율 : 10년새 3배 이상 증가('95 : 10만명당 18 → '05 : 55명)

◇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능동적 복지모델의 실천 아이템

-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사업체 생존율도 높은 성장분야로 전망(한국은행, '08)

구분	서비스업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취업계수('05)	18.4명	29.9명	10.1명
4년 생존율('05)	38.3%	66.2%	숙박·음식업 28.7%

※ 취업계수 : 10억원 생산시 고용창출효과(한국은행)

- 가정의 부양부담 완화와 저소득여성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일석이조 효과

※ 돌봄 종사자 중 여성비율 : 92%

(동아일보, 12. 15) 기초생활자가 도시락 배달 ... "급식+일자리창출" 효과

.....부천시는 방학중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은 기초수급자들에게 맡겨 아동급식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 '09년 역점 실천과제

-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보호기능 강화
- 『저소득 여성일자리 확대』 :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마이크로 크레딧 대출을 자립의지를 가진 저소득여성가구에게 우선 지원

과제 4

노인·장애인·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 '08년 21만명 → '09년 23만명 → '10년 27만명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50% 경감(2만명)

○ 노령기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건강문제를 집중 진단하는 노인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전국 보건소 확대 및 차상위계층에 약제비 바우처 지원('10) 등 치매 종합관리·지원 대책 추진

* 현재 치매환자 약 40만명(노인의 8.3%) 중 의료기관 치료는 1/3 수준

○ 독거노인 등에 노인돌보미를 파견,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결, 가사·간병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09년 13만명 대상, 8천3백명 파견)

* '09년 독거노인 98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19% 차지

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 촉진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09. 2)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청각, 지적 장애아동 등 1만8천명에게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을 위하여 1인당 월 18~22만원의 바우처 제공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확대

* '08년 2만명, 월평균 56시간 → '09년 2만5천명, 월 평균 72시간

3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08년 32개 지역 → ’09년 75개 지역)
 - * 수혜아동 9,600명(’08) 수준 → 22,500명(’09)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강화**로 가정의 보호기능 보완
 - * 지역아동센터 지원(2,788개소, 611억원), 방과후 아카데미(180개소, 129억원)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최대 가동
-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청소년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 지원청소년 수(’08년 6만명→’09년 9만명)
- 저소득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전국 확대**(’08년 65개 지역)
 - * 수혜가정 : ’08년 2만8천가구 → ’09년 8만4천가구

4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 (보육료 전액 지원) 차상위(39만명)→소득하위 50% 이하(61만명) 까지 확대
 - (양육수당) 차상위 1세 이하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월 10만원, 11만원)
- **보육서비스 공급기반 개선 및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 부모의 복지체감도 증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i-사랑카드(바우처)** 도입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 지급, 대체교사 인력 지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등
 - **농어촌 등 영유아 수가 적은 지역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과제 5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 저소득 무직가구 0% 도전

○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노인·아동·장애인·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자살 예방 등 정서적 지원 및 유기·학대 예방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

* 사회서비스 일자리 : 8개 부처 35개 사업('09년 12.5만명)

이중 복지부 소관 16개 사업('09년 7.2만명)

○ 특히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장년층 여성에게 적합

- 신규(교체분 포함) 약 1만4천개 일자리*는 무직가구 여성에게 우선 제공토록 즉시 조치('09.1월 시행)

* 아이돌보미(4,550명), 장애인활동보조(4,300명), 산모신생아도우미(600명), 방문보건서비스(400명), 노인장기요양(4,400명) 등

-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경기침체 심화시, 재정투입의 일자리 확대효과가 빠른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1조원 투입시 약 10만개 일자리)

※ '90년대 말~'00년대 초 금융위기 국가에서 빈곤대책 중 공공재정 일자리, 한시적 현금지원 등이 정책효과성이 있었다고 평가(Worldbank, '08)

2]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에 Microcredit 지원 확대

○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신용대출) 지원 확대('08년 20억원,180가구 → '09년 130억원, 1,100가구)

* 지자체 자활기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관련 창업자금도 마이크로크레딧 방식 전환 검토

○ 여성가장 등 저소득여성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우선 지원 및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지원(양육서비스, 재무컨설팅 등) 적극 제공

◇ 보건의료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 확대 추세,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산업

※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 : '05년 \$6,020억 → '10년 \$9,900억 예측

※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 : '05년 \$200억 → '10년 \$400억 예측

○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 높은 기술 수준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 장기이식, 위·간암, 불임시술, 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싱가포르는 종합병원 29개로 해외환자 40만명('06년)을 유치, 한국은 종합병원 315개가 있으나 2.5만명('08년 추정) 해외환자 유치

○ 제약산업 : 작은 회사의 난립과 불투명한 유통구조

- 복제약 영업 위주의 후진적 경쟁체계, R&D 투자 부족

※ 국내 제약기업(781개)중 매출액 100억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50.2%('06년)

※ 일부 통증치료제의 경우, 170여종의 제네릭 의약품 시판 허가

◇ 제약산업 등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고, 과감한 투자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

◇ '09년 역점 실천과제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홍보 등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및 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R&D 지원 강화

과제 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외국인 환자에 한하여 유치활동 허용(의료법 개정)
-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비자제도 개선
-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보급('09.9)

* 외국인 환자 유치 : '08년 2.5만명 → '09년 4만명 → '12년 10만명

2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외국인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

- 기존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 병원 (hospital in hospital) 설치 촉진 방안 마련
-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입출국·진료예약 등 토털 서비스 제공

3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해외 환자유치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MOU 체결 추진

* 국내병원과 미국 대형보험사와 연계상품 개발 진행 중

- 한국의료 "World Best Practice" 선정 및 홍보

* 싱가포르의 경우 삼쌍둥이 분리 수술이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임

- 해외환자 유치상품 시범사업 실시 추진

-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

* 예) 미국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의료기관 간 건강검진, 진료상품 개발

과제 7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제약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

* 신약 및 전문의약품('08) → 일반의약품('09) → 원료의약품('10)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전환 유도

-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신약개발 촉진

- 의약품 보험등재과정 개선(개량신약 등재시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절차 생략)
- 개량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허가절차와 약가 심사를 동시 진행)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신물질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

* 의약관련 R&D 지원 : '08년 510억원 → '09년 625억원

-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 투자 유치

- 지역임상시험센터 추가 지정(12→15개소)으로 신약 개발 기반 확충
-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투자 유치(노바티스·머크 등 투자 유치 진행 중)

* '12년까지 3억불 투자 유치('07년)

- 보건의료분야의 중개 연구 강화(740억원) : 임상 의사 참여

3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지원

- 미백, 노화방지 등 기능성·한방 화장품 소재 개발, 국제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08년 12억원 → '09년 40억원)

* 국내 1위 기업의 매출(122억불)은 세계 1위 기업(로레알)의 7.6%에 불과

* 글로벌화 성공사례(아모레) : 프랑스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향수시장 점유율 5위 달성

◆ 대통령님 말씀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 보호('0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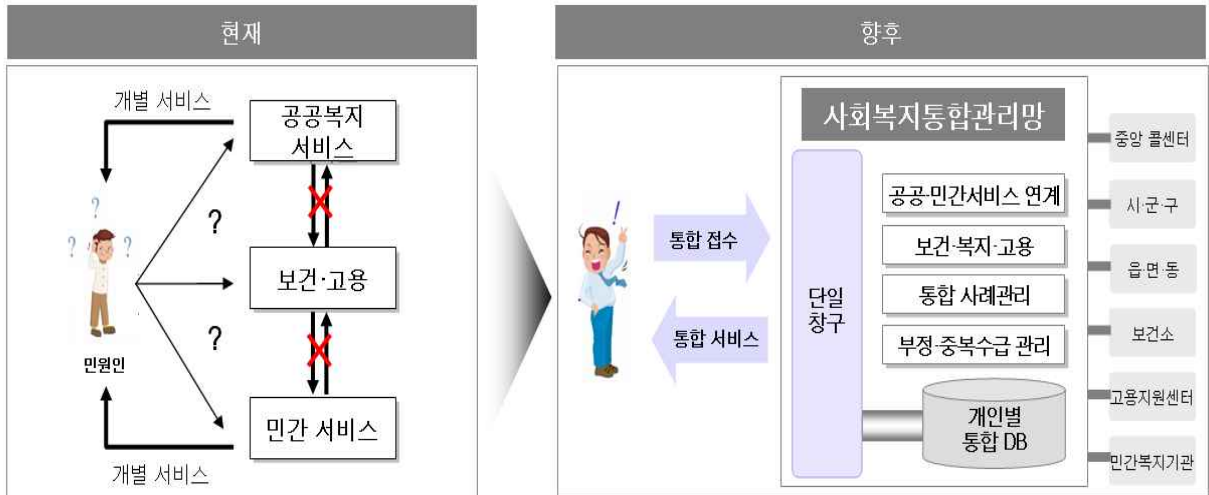
“예산은 많이 늘어났으나, 시스템은 옛날 것이므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해서 국민만족도 제고('08. 4)”

- ◇ 지난 5년간 복지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으나(연평균 14.6%), 국민 체감도는 낮고 부정·중복 수급 등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 제기
 -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
- ◇ 한편,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복지부소관 기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재원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
- ◇ '09년 역점 실천과제
 -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성과중심 예산방식 도입,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방법 확대 등
 -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 집행율이 저조한 기금을 전환 활용
 - * 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등

과제 8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시스템 개혁('09.1)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소득·재산조사의 간편화 및 자동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조사 및 서비스 제공시 소요기간 단축(17일→8일)으로 현장서비스 강화
-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 정보를 개인별 통합 DB로 전환
⇒ 통합적 서비스 이력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 발생 사전 차단
⇒ 장애인, 아동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효율적 자원 활용
⇒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집중 보호·지원(사례관리)
⇒ 민간복지기관간 유사기능 조정, 통·폐합 등으로 서비스 중복 제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08. 11), 업무재설계 완료('08.4~12)
- 10개 시군구에 대한 조직개편 시범사업 실시('09.1) 후 전국 확대('09.1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09.6)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바우처(Voucher)제도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운영

【바우처 제도의 확대】

- 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을 공급기관 지원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의 바우처로 전환, 신규 사업은 우선 적용
- (목적)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전자카드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서비스 중복이용 방지
 - * 기존 5개(노인돌보미 등) → 8개로 확대(보육, 임산부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활)
 - * '09년 바우처 지급대상 : 160만명(1조 7,300억원)
- (기반구축)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가칭)' 제정('09.6),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09)로 시장형성 촉진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기관 예산지원을 사업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09년 시범사업 후 확대)
 - * 자활사업 취업성공율 : '08년 14% → '09년 16% → '12년 22%

③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 (목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의 증진 및 기업환경 개선
 - * 징수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연간 783억원
- (향후일정) 관련법률(6개 사회보험 법률) 정비, 징수인력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노정간 협의 등을 거쳐 징수통합 추진('10. 7월 시행)

과제 9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1 필요성

-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기금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적극 활용

2 가용 재원의 발굴 (예 시)

- 「자활기금」 (2,024억원, 기초생활보장법)
 - (내 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세자금·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지자체가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지방의회 의결)
 - ⇒ (활 용) 지자체 자체적으로 일시적 빈곤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확대 등 적극적 운용 유도
- 「식품진흥기금」 (2,800억원, 식품위생법)
 - (재 원) 식품위생업체에서 징수한 과징금, 출연금, 수익금 등
 - (내 용) 영세 식품가공업소 시설개선 용자, 식품위생 교육·홍보
등을 위해 설치, 유흥업소 인테리어 지원 등에도 사용된다는 지적
 - ⇒ (활 용) 안전식품 인증(HACCP),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업소 지원 등

3 복권기금·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민간 재원

- 복권기금·휴면예금('09년 2천5억원)을 일시적 빈곤층 등을 한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검토

[핵심 상시과제]

- 과제 ① 저출산 대책 및 다문화 가족정책
- 과제 ②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과제 ③ 먹을거리 안전

1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비용 지원('08.12~), 불임부부의 임신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지원횟수 : 2회 → 3회) 등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 민간 병·의원에서 BCG, B형간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시(8종, 11개 전염병) 접종비의 1/3 수준 지원('09~)
- 기업과 협력하여 가족친화분위기 확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 확대

* 가족친화제도 : 탄력근무제, 출산지원, 자녀교육 지원, 부양가족지원 등

2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 등 역량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강

* 활동시설 확충 : 국립시설 4개소, 공공·민간수련시설 396개소 추가 건립(~'13)

-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생활여건 제공

* '09년 예산에 경찰청 퇴직 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신규 편성(32억원)

→ 취약시간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3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20개소 확충(80→100) 및 전담인력 증원(1인→2인)

- 다문화가족 자녀(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09)

*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 보육시설에 전문 언어교육사 정기적 파견

상시과제 2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① 흡연·음주·스트레스 등 경제위기로 악화될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

- 담뭏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 공중시설의 모든 실내·실외를 금연 구역화하고 학교·병원 등의 음주·주류 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 자살 예방 등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검진 확대

②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치료 미흡시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09. 시범사업)
 - 환자는 본인부담 감면,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제공
 - * 고혈압 환자는 24.9%(30세 이상)에 달하나 지속 치료율은 55.5%에 불과
-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증가, 폭염 등 건강 적응대책 추진
 - 말라리아 등 매개체 전염병 집중관리, 건강예보제 시행('09. 폭염, 천식예보제 등), 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③ 지자체가 지역주민 건강에 투자하도록 유도

- 시군구 건강통계조사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도입('09. 4), 건강도시 발전포럼 운영, 건강친화형 지자체 선정제도 도입('09. 11) 등

1 생산·검사·수입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 위해요소 제거

- (기준) 멜라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확대

* 현재 1,713개 → '09년 1,800개 → '10년 1,882개로 확대(EU 수준)

- (생산) 안전한 식품 생산업소에 대한 안전인증 확대

* '08년 451개소(전체식품량의 30% 수준) → '09년 1,000개소 → '12년 4천개소(95%)

- (검사) 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매3년마다 지정갱신, 재평가

- (수입) 해외위탁생산(OEM)식품 품질검사 의무화 및 현지 검사기관 설립 유도

* '09년 상반기 중 중국 청도에 현지 공인식품검사기관 설립(약 50억원 소요 추정)

2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 해외위탁생산(OEM) 식품에 위탁생산 여부 및 제조국가명 표기('09.4)

- 식품정책 수립시 “국민참관인”제, TV 자막방송 등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09. 7) 등 안전정보 제공 강화

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 학교 및 학교주변(200m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금지('09. 3)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방지

- 학부모 및 어린이등이 우수한 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녹색표시제」 도입 추진('10. 1)

III ■ 재정 조기집행 계획

□ 재정집행 여건

- '09년 복지부 재정(28.4조원) 중 조기집행대상은 국민연금기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19.9조원
 - * 복지부 재정 : 예산 18.4조, 국민연금기금 8.2조, 건강증진기금 등 1.8조
- 조기집행대상 사업(19.9조원) 중 84.6%(20개 사업 16.8조원)은 생계급여 등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서 조기지출에 한계

□ 조기집행 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62.8%
-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9개 사업을 중점조기집행사업으로 관리 (☞ 중점관리사업 상반기 재정 집행률 66.9% 달성)

(단위: 억원)

구 분	'09년 재정	'08년 상반기 집행률(%)	'09년 상반기 집행률(%)
총 계	198,512	55.3	62.8
중점관리 사업 소계(159개)	21,066	44.3	66.9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	2,557	25.3	63.6
공공의료체계 보강사업 (19)	3,197	18.5	69.2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1)	12,003	56.0	66.8
보건의료 R&D 사업 (91)	2,987	50.7	67.4
정보화 사업 (12)	322	32.3	71.2

□ 집행절차 단순화 등 조기집행 방안

- 지방비 매칭사업은 확정 내시(12.17) 및 사업지침 조기 확정(12.24) 등 사업 준비 연내 완료
- 직접 추진사업은 금년 중 사업준비를 마치고 공고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내년 1/4 분기 중 사업계약 등 완료
- 조기집행 특별점검단(단장:차관)을 구성·운영하고, 행안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붙 임]

1. 주요과제 실천계획
2.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3. 주요 입법 추진현황

주요과제 실천계획

과제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일정
1분기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1월
	■ 긴급생계지원 확대	3월
2분기	■ 푸드마켓·물류센터 등 식품기부 인프라 확충	6월
연중	■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 지원 확대	
과제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1월
2분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6월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6월
과제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복지현장 보조인력 배치	3월
연중	■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총력지원체계 구축	
과제4	노인·장애인·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지역 선정	1월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1월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2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확대	2월
하반기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7월
	■ 노인특화 건강검진제도(도입 '10년) 고시 제정	11월
연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0년
	■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과제5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여성 위주 일자리 지킴 시행 	1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확대 	'10년
과제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외국인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 의료 코디네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3월 3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과제7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산업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 의료 코디네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지원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약가등재과정 개선) 	5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적용 확대 ■ 임상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 투자 유치 	
과제8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정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10개 지역) ■ 성과 중심 자활 시범사업 실시 	1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 	6월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희망복지지원단」 전국 확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 	12월 12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시행 '10.7월) 	
과제9	사장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기금 적극 활용 ■ 복권기금·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민간재원 활용 	

'08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 긴급 현안 과제			
실천과제	추진 계획	이행 실적	비고
식품안전 관리강화	○ 소비자 불만신고 식약청 보고의무화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1.20. ~ 12.10.)	정상
	○ 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 회수등급제 도입(4.17.)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6.20.)	정상
	○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11.21)	정상
	○ HACCP 제도 확대	○ HACCP 적용업소 확대 및 중소기업 HACCP 모델 마련(5월), 보급(6월)	정상
실종아동 찾기대책	○ 일시아동보호시설 지정·운영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4.30)	정상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실종아동찾기 지원	○ 실종아동 발생현황 및 수사 진행 상황 특별점검(4.14~6.25)	정상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날(5.5) 실종아동의 날 (5.25) 행사 캠페인 전개	정상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제도개혁	○ 기초노령연금 확대	○ 수급연령 확대(7월) 65세이상(282만명) ○ 수급율 확대 '09.1월 356만명	정상
	○ 기금운용체계 개편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8.6)	정상
	○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1.12)	정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재정지출 절감	○ '09년도 재정지출 절감대책 마련(11.27, 건정심의결)	정상
기초생활 보장 급여 체계 마련	○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차등화	○ 중장기 과제로 검토기로 결정(4월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중장기 검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 삶의 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상
	○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의학적·직업적·복지욕구평가도구' 모의적용 실시 (7.7~12.31)	정상
	○ 장애수당 확대	○ 장애수당 수급자수 확대 * 39만8천명('07.12)→42만8천('08.10)	정상
	○ 65세 미만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서비스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형(안) 마련(12월)	정상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보건의료 산업육성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일 '08.6.29)	정상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실적 증가 - 16,586명('07.)→38,822명('08.8월) ○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	정상
	○ 고령친화 및 한의약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08.1~) ○ 한방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한방산업진흥원 준공('08.12/2개소)	정상
	○ 오송단지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	○ 식약청 등 국책기관 신축·이전 사업 정상 추진 중('08.12월 공정율 36% 예상)	정상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 중점 투자영역 발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11개 사업 발굴(12)	정상
	○ 서비스 지원방식 전환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전자바우처 방식 전환(9.1)	정상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조정·통합 (13개→5개)	정상
일을 통한 복지	○ 노인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2만개)	○ 주유원, 가스충전원 등 틈새시장 인력파견 등 18,800개(11월 현재)	정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일자리 확충(총 23,228개)	정상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08.4월 대통령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결정	중장기 검토
	○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9월~10월)	정상
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 운용	○ 투자자산 다변화로 재정 안정 도모	○ 주식, 해외·대체투자로 투자 자산 다각화 추진	정상

3. 미래대비 가족정책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0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12.15)	정상
	○ 예방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65→83개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상
	○ 국제결혼 인권침해 해소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정상
	○ 보육료 지원 확대	○ '09년 무상보육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정상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82개소	정상
	○ 보육료 전자바우처 지급	○ i-사랑카드 사업자 선정('08.12)	정상
	○ 선정기준 및 지원등급 단순화	○ 등급 단순화 - ('08)5층 지원→('09)3층지원	정상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드림스타트 추진	○ 32개 지역 22천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상
	○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 계좌발급 아동수 : ('07. 4월) 28,899명→('08. 12월) 33,238명	정상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강화	○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시행(2.4)	정상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추진	○ 지역중심의 시군구 CYS-Net 사업지역 확대	정상
	○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운영위원회 - 250개('07년)→258개('08년)	정상
노인장기요 양보험 실시	○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	○ 시설충족률(107.6%, 10월)	정상
	○ 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 수요충족	정상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 항암제 등 치료재료 급여확대(1,790억)	정상
	○ 필수의료서비스 공공책임 강화	○ 어린이병원 1개소 개원 ○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추진('08. 511억원)	정상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 예방적,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중	정상
	○ 예방접종률 제고	- 예방접종일정알림 서비스(SMS) 시범 사업 실시	정상
	○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 사업 확대	- 건강포인트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09.1월 완료예정)	정상

◆ 복지전달체계 및 인프라 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 129콜센터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기본계획(안) 수립(6월) ○ 지자체 등 공청회(11월) ○ 민간 전달체계 기능 강화방안 마련(12월)	정상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09년 우수시설 인센티브 예산 확대 (1억원 → 7.7억원)	정상
민간복지 자원 활용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발의(11.6)	정상
	○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 강화	○ 상해보험 가입 : 7만명	정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요원 지원 강화	○ 인증요원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훈련(120명 양성)	정상
	○ 자원봉사캠프 설치	○ 자원 봉사캠프 설치 운영(10.15)	정상
사회복지성과 관리체계구축	○ 시설평가	○ 323개소 평가실시(4~12월)	정상
	○ 지자체평가	○ 복지종합 현장평가 실시(6월)	정상
복지급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소득·재산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법정급여 자격조회 자동화	○ 통합급여관리망 구축관련 BPR/ISP 마련 (12.10) 및 부처협의 완료(12.15) - 서울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정상
	○ 수급자 개인별 「통합DB」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반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11.17)	정상
◆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			
보건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외국인 환자 알선 허용	○ 의료민영화 논쟁으로 입법 추진 일정 조정	추진중
	○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	○ 법률제정안 국회제출(10.22) - 복지위 계류(검토)	추진중
	○ 의료기관 명칭표시 완화	○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제	추진중
	○ 병상기준 상향 및 특수 기능병원 도입	○ 상임위 통과 및 법사위 계류중(12.12)	추진중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 상임위 통과 및 법사위 계류중(12.12)	추진중
	○ 보호자 처방전 수령 허용	○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제	추진중
	○ 복지급여 지원기준 간소화	○ 보육료 신청 방식 변경	정상
보건복지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금연 등 민간서비스시장 조성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중	정상

주요입법 추진현황

법률명	주요내용	제출·발의	비고
1 의료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자유치 허용 · 의과·한의과 협진 체계 구축 · 복수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정부 (10.13일)	· 법사위 계류 (12.12)
2 국민연금법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정부 (8.6일)	· 상임위 법안소위 (11.20)
3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간의 가입기간을 연계 · 연계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해당 연금 지급률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정부 (11.12일)	· 상임위 법안소위 (12.12)
4 식품위생법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우병, AI 등 사용식품 등을 조리·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최저형량제 강화 ·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도입 ·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 우수 수입업소제도 도입 	정부 (11.21일)	· 상임위 법안소위 (12.3)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개설허가(등록) ·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 의약품 등 수입허가기준 완화 · 의료관계 법령의 특례 규정 	황우여 의원 (11.5일)	· 미상정
6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전문모금기관 지정을 통해 사회복지 모금 사업 수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거 폐지) 	손숙미 의원 (11.6일)	· 상임위 법안소위 (12.12)
7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채권 발행 근거 마련 - 발행기관, 발행조건 및 절차 등 ·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 허용 	정부 (10.22일)	· 미상정